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93
----------	------

발의연월일 : 2025. 3. 24.

발 의 자 : 서일준 · 임종득 · 이종배
고동진 · 이현승 · 강승규
이인선 · 이상휘 · 김장겸
권성동 · 강명구 · 윤영석
윤한홍 · 정점식 · 박형수
송언석 · 나경원 · 김정재
김상훈 · 최형두 의원
(20인)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나, 최근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하락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위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의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지원, 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 분야 국제협력과 조선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
· 제조 · 가공 · 조립 · 재생 · 개조 · 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해나 자원의 탐사 · 개발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된 이동식
· 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

2. “조선기술”이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기술을 말한다.

3. “조선기업”이란 조선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조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등

제5조(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조선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조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조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선산업 관련 연구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조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대상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 기반 조성

제7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기준·절차,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선기술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조선기술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조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예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

향과 조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선기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조선산업 관련 제품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조선산업 관련 제품,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 등(이하 “조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조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조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

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선표준에 적합한 조선기술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조선기술등이 조선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선표준의 제정과 제2항에 따른 인증,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3조(조선기술등의 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조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 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조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조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조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선산업 및 조선
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조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
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또는 조선기술과 관련된 민간부
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조선기
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지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기업에 기
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조선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조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제 및 금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조선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

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